

제2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회의결과

1. 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'17.11.24(금), 14:00~18:00, 중앙우체국 21층 회의장
- 내 용 :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발표 및 토의 등
- 출 석 : 위원 15인

※ 이대 김상택 교수, 전남대 황인태 교수, 녹소연 이주홍 사무총장, 국조실, 산업부 불참

2. 주요 내용

① 대변인 선임

- 국민과의 소통, 언론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하여 전문가 위원 중 변정욱 교수, 정부위원 중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을 공동 대변인으로 선임

②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

< 제조사 입장발표 및 토의 >

- ① 삼성전자 : 완전자급제 시행 시, 이통사 지원금이 사라지고, 제조사는 유통관리 비용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구입부담이 줄기 어려움
 - 글로벌 제조사가 한국에서만 가격을 조정하기는 불가하고, 외산폰은 유통비용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 진입에 애로가 있어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단말기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
- ② LG전자 : 완전자급제 취지는 이해하나 전체 시장구조가 바뀌는 것이므로 소비자 편익 예측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
 - 단말기 출고가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어 완전자급제가 시행되어도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

③ 주요 논의사항

- (정부) 제조사의 경쟁력 있는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및 이통사항 무약정 단말기와의 가격차별 해소 필요
- (경실련) 출시된 지 오래된 단말기의 지원금·장려금을 늘리는 대신 가격(출고가)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
- (유통협회) 분리공시 제도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인하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(경실련, 변정욱 교수) 자급제 활성화 방안 논의 필요

< 소비자·시민단체 입장발표 및 토의 >

- 4개 단체 공동으로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대안으로 제시
 - 단말·서비스 결합판매의 근원적 해결책으로 완전자급제 법안을 평가하고 있으나,
 - 법안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유통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 우려가 크며 완전자급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인 바,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
 - 단말기 유통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·이통사·제조사의 노력이 필요함

< 이통사 입장발표 및 토의 >

- ① SKT :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이통사의 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
 - 완전자급제 도입 시 이통사는 요금 밖에 경쟁 수단이 없어 요금이 인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나,
 - 통신사 장려금의 단말 보조금 전용 등 불·편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가 어려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함

② KT : 완전자급제 도입에는 긍정·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며, 긍정적 측면으로는 단말 및 서비스 경쟁 가능성을 들 수 있음

- 다만, 대기업 주도 유통망 형성, 단말가격 인하 효과 불분명, 장려금을 활용한 불·편법 행위, 이통시장 선발사업자 지배력 강화 등이 우려됨

③ LGU+ :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및 요금 경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글로벌 경쟁으로 인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어렵고 유통업체에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

④ 주요 논의사항

- (유통협회) 단말기·요금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근거 제시 필요하며, 단말 유통 활성화, 자급제 요금 활성화가 필요함
- (정부) 완전자급제 시행 시, 25% 요금할인 등 현재 이용자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,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MNO의 협조가 필요
- 완전자급제 이후 요금경쟁이 아닌 경품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와 서비스 분리 효과가 반감될 우려

< 알뜰폰협회 입장발표 및 토의 >

-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과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이통3사 합의를 통해 점진적 자급제 활성화 유도가 바람직하며 중저가 단말유통도 확산될 필요

< 유통협회 입장발표 및 토의 >

- 강제적인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며, 자급제 활성화에 찬성함
- 완전자급제 시행 이후에도 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는 불투명하나 유통망의 피해는 확실하게 예상됨

③ 차기회의 논의사항 및 일정

-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고, 완전자급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기로 함
- 논의 진도에 따라 12월 15일(금) 추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, 보편 요금제와 알뜰폰 활성화에 2회, 인가제·요금구조·기본료 폐지 등에 2~3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기초로 위원들 의견을 추가 수렴